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요인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김형철*·박용수**

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6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변화와 그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17~18대 총선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선거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진보정당(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쟁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선거구 투표보다는 정당투표에서의 높은 득표율에 따른 결과이다. 진보정당(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보정당(후보)이 정당투표뿐만 아니라 지역선거구 투표에서 선거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의 선거경쟁력은 정당 또는 후보의 당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낙선한 정당 및 후보의 선거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보정당(후보)의 당선자와 후보자 사이의 득표율 차이를 대비하여 양자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을 측정하였으며, 17~18대 총선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선거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화력 수준, 부동산 자산의 정도와 강복과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투표율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추론통계기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진보정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사회경제적으로 민주당과 중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강남과 강북이라는 지역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국의 보수적 정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고, 1위대표제에 기초한 지역선거구에서도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모색은 불가피하다.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이외에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정당이자 정치인으로서 전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출마지역에 뿌린 내릴 수 있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

주제어: 진보정당, 선거경쟁력, 정당체계, 유효정당 수, 혼합형 다수대표제

* 한국외국어대학교

** 연세대학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6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회의 원선거를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변화와 그 조건을 탐색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선거구에서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17~18대 총선을 대상으로 진보정당(후보)가 출마한 서울지역 선거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에 있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며, 지지자의 정체성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당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정당의 강령과 지지자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반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노동친화적 정책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의 보장을 지향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고, 그 수준은 민주화 이후 지속된 서울지역 선거결과와 유형 변화가 거론될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여타 진보정당은 참패로 규정되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18대 총선이 변화하는 선거경쟁 환경 속에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13대 총선 이후 서울지역에서 전개된 선거경쟁구도와 결과를 시기별로 살펴본 후, 진보정당(후보)이 서울지역에서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진보정당(후보)은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 경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변화되기 이전(13대~16대)에 진보정당은 전국적으로 약 1.43%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변화된 이후(17대~18대), 진보정당의 득표율은 전국적으로 지역득표율 약 4.5%와 정당득표율 10.9%를 획득하였으며, 17

대와 18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의 증가와 국회진출의 정치적 의미는 정당체계 차원에서 이념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편향화된 보수독점의 정당경쟁구도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경쟁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정당경쟁구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구조적 수준에서 정치균열의 변화로부터 행위자적 수준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까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1인 2표의 혼합형 다수대표제로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진보정당(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쟁성의 확대는 지역선거구 투표보다는 정당투표에서의 높은 득표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석의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현실에 있어 보수독점적 지역정당들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일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정당(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보정당(후보)이 정당투표뿐만 아니라 지역선거구 투표에서 선거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의석의 확대가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서 지역선거구에서의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이 요구된다. 현행 선거제도와 같이 1위대표제가 지배적인 현실에서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더라도 개별 후보의 득표력은 정치적 대표성과 이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역선거구에서 진보정당(후보)의 득표결과나 득표력에 대한 논의, 특히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서울지역으로 제한한 이유는 첫째, 서울지역의 득표율은 진보정당이 득표한 최고득표지역과 최소득표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득표율에 근사치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지역에서 얻은 선

거결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파급효과를 지닐 수 있다. 둘째, 서울 지역의 선거결과는 지역주의에 따른 동원의 편향성이 낮기 때문이다. 즉, 서울지역은 다양한 지역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선거경쟁력에 있어 지역주의의 영향이 통제될 수 있다. 셋째, 서울지역은 선거경쟁력에 있어 계급(층)별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이슈와 정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은 강북과 강남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이들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집합자료를 통해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설 및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1987년 이후 서울지역에서의 선거경쟁구도의 변화와 함께 이후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결과의 변화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지역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향상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검토 및 분석 틀: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1) 기존 연구 검토

한국에서의 선거연구는 다른 정치학분야에 비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풍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선거연구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낳은 연구주제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와 선거제도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먼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강원택 2003; 2004; 김형준·유성모 1997; 안순철·가상준 2006; 이지호 2009; 정영태 2005). 그러나 이들 연구는 유권자 개별에 분석수준을 맞춰 종속변인으로 투표한 정당(후보)만을 고려함으로써 정당 간의 선거경쟁력에 대한 집합적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체계적 수준에서 정당정치 변화 또는 선거 경쟁구도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의 등장, 발전 그리고 쇠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선거제도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제도적 차원에서 선거 제도가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 투표참여성, 그리고 정당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영태 2003; 김왕식 2006; 박찬욱 2004; 정준표·정영재 2005; 장훈 2006). 그러나 이 연구들은 체계적 수준에서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정당정치 변화를 설명하지만, 개별정당이 선거에서 승리와 패배의 원인과 더불어 선거전략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최근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문우진 2005; 2006; 황아란 1998; 2002; 2008). 한국과 같이 1위대표제에 의한 의석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선거구에서의 정당의 득표율 변화가 국회의석 점유율과 국가정책에 민감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선거경쟁력은 반응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황아란 1998, 164; 2002, 204).

선거경쟁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장점은 첫째, 이론적 장점은 다양한 내용의 선거과정과 경쟁양상을 반영하여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황아란 1998, 165). 즉, 선

거경쟁력은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과정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환경)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거과정의 역동성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둘째, 당선 또는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정당(후보)의 선거전략, 특히 정책입장과 이념성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직자의 정책입장이 선거자원과 득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우진의 연구(2005; 2006)는 공간이론에 기초하여 현직자가 온건한 정책을 취하면 급진적 이념성향의 기부자가 제공하는 선거자원을 잃지만 선거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득표와 선거자원 사이의 상쇄(trade-off)효과를 주장한다. 비록 이 연구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선거전략으로서 온건한 정책입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전략과 유권자의 지지 양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집합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행태 및 유권자의 투표양상의 연구는 서베이나 인터뷰 등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 하며,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체계적 수준에서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집합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은 개별적 수준뿐만 아니라 체계적 수준에서 정당의 행태 및 유권자의 투표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선거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당선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지도 그리고 현직여부가 정당 또는 후보의 선거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문우진 2005; 2006; 이남영 1996; 황아란 1998). 이들 연구는 선거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역과 후보의 현직여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직효과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으며, 후보자

경쟁에 있어서 후보들의 현직 보유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황아란 1998). 즉, 현직여부는 높은 지명도와 인지도, 지역구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업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선거자원의 동원과 선거운동 기회의 부여 등에 의해 선거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최근의 연구는 현직자의 정책입장과 선거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문우진 2005; 2006). 먼저 현직자의 정책입장이 온건할수록 선거자원의 상실이 존재하지만 득표력의 증가라는 긍정적 관계가 형성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지출과 선거경쟁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현직자가 이전 선거에서 큰 득표 차이로 승리한 경우에는 선거지출이 크지 않지만 적은 표차로 승리한 경우에는 선거지출이 선거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이 연구는 미국의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과연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도적 환경 및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거경쟁력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변화되었는가?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존재한다(강원택 2004; 안순철·가상준 2006; 정영태 2005) 즉,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념 및 정당선호도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와 투표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의 분석결과는 커다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중간계급(층)과 386세대라고 일컬어지는 30~40대에서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노동조합 및 농민단체의 가입여부가 민주노동당의 지지

와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 및 정치의식에 있어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지역선거구 투표 및 정당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¹⁾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의 주요한 요인에 대한 평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원택(2004)의 연구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의 표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 열린우리당에 대한 거부감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안순철·가상준(2006)과 정영태(2005)의 연구는 정치적 효능감과 만족도 보다는 현 정치권에 대한 불만정도가 강할수록 민주노동당에 투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의 지지자 및 투표자의 특성을 밝히고, 진보정당의 지지층 및 투표층의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계는 이들이 제시한 종속변인이 정당투표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역선거구의 의석수가 정당투표에 의해 분배되는 의석수보다 4.54배가 큰 한국의 선거제도하에서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 평가와 유권자들의 특성 및 지지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와 더불어 지역선거구 투표에서의 유권자들의 특성 및 지지양상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 조사결과는 지역선거구 투표에서의 유권자들의 특성 및 지지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손낙구

1) 이념과 민주노동당 지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보다 더 진보적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정책요구와 성향이 열린우리당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강원택 2004, 160-161). 이는 정당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하였으나, 지역구 투표에서 열린우리당을 선택하는 분리투표 경향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안순철·가상준 2006, 43 참조).

의 연구(2010)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행정구역(동)의 구성원들의 부동산 재산의 정도, 학력수준, 그리고 종교 분포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와 투표율 및 정당득표율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집 가진 사람, 대학 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민주당의 득표율은 무주택자, 비아파트 거주자와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살고, 대학 이상 학력자가 적게 사는 곳일수록 높게 나오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진보정당(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신당)은 기초행정구역의 특성과 지지율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손낙구 2010, 18).

그러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엄밀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빈도분포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투표율 및 정당득표율 사이의 경향성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선거구 투표에서 지역유권자들의 특성과 진보정당의 득표율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과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추론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손낙구(2010)가 수집한 각 기초행정구역의 특성 중 학력수준, 부동산 재산의 정도와 강북과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투표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가설로서 먼저 기존 연구 결과에 있어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는 독립변인으로서 학력수준과 진보정당(후보) 사이의 관계를 가설로 채택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과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투표 사이에 긍정적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강원택 2004, 152; 안순철·가상준 2006, 49). 그러나 손낙구(2010)의 조사에 따르면, 학력수준과 진보정당 사이의 관계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전국적 차원이냐 아니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차원이냐와 지역선거구 투표냐 아니면 정당투표냐라는 조사대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학력수준과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대학이상 학력자가 많은 지역선거구일수록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이 높아진다.

가설 1>의 경우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주택 소유 여부와 정도일 것이다. 손낙구는 서울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이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지역 10곳에 대한 주택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택소유자가 35%이며 무주택자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지역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자 비중은 64%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력이 높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유권자일수록 진보정당(후보)에게 투표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여부가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채택하였다.

가설 2> 주택 소유비율이 낮은 지역선거구일수록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이 높아진다.

최근 투표율과 진보정당의 득표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서울지역의 경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일수록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한다(손낙구 2010, 115).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및 개혁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설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득표율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채택하고자 한다. 또한 강남과 강북 사이에 진보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 투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강남일수록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이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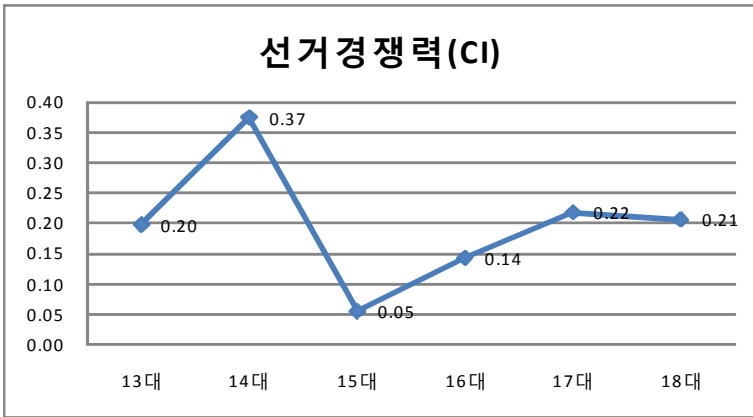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의 선거경쟁력은 정당 또는 후보의 당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당선한 정당 또는 후보의 선거경쟁력을 파악함에 있어 장점이 있으나, 낙선한 정당 및 후보의 선거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당선자의 득표율과 낙선자의 득표율의 차를 통해 선거경쟁력을 측정하는 연구도 존재한다(황아란 1998). 선거경쟁력은 당선자와의 낙선자의 득표율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당이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낙선자 또는 패배한 정당의 득표율은 정당연합이나 캐스팅 보우트를 통한 정부구성이나 정치적 역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동일한 득표율의 차를 보이더라도 경쟁자의 수에 따라 경쟁의 정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제(황아란 2002, 207) 하에서 당선자와 후보자 사이의 득표율 합에 대비하여 양자 간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을 측정하였다.²⁾

²⁾ 황아란(2002, 207-208)의 연구는 당선득차율에 따른 당선경쟁력의 측정방법은 당선득차율이 동일하더라도 경쟁자의 수에 따라 경쟁력의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당선

$$\text{선거경쟁력(CI)} = 1 - [(\text{당선자득표율} - \text{진보정당(후보)득표율}) / (\text{당선자득표율} + \text{진보정당(후보)득표율})] \quad 0 \leq \text{CI} \leq 1$$

위의 공식을 통해 진보정당(후보)의 역대 선거경쟁력을 계산한 결과, 14대 총선시기에 가장 높은 0.37를 보이고 있으며, 15대 총선에서 가장 낮은 선거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인 2표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화된 이후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은 평균 0.2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서울지역 진보정당(후보)의 역대 선거경쟁력의 변화



독립변인으로 제시된 학력수준과 주택소유비율은 손낙구(2010)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즉, 학력 수준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로 측정하며, 주택소유비율은 지역구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모든 가구

경쟁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즉, 당선자와 후보자의 득표율을 합하여 이를 당선자와 후보자의 득표율 차이로 나눈 뒤 이를 1에서 뺀 값을 당선경쟁력지수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낙선자 또는 패배한 정당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황아란의 당선경쟁력지수 공식을 이용하였다.

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주택소유여부는 기존 연구에서 잘 이용되지 않은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직업이나 소득수준을 통해 계층을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산규모를 중심으로 계층에 따른 정당투표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지역선거구에서의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서울지역에서 선거경쟁구도의 변화와 진보정당(후보)

1) 서울지역 선거경쟁구도의 변화

본 연구는 서울지역 선거경쟁구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정당의 득표율의 차를 중심으로 선거경쟁구도를 우선 구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경쟁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and Taagepera 1979)의 '유효정당 수'이다.³⁾ 유효정당의 수는 정당의 득표율 분포에 의해 결정되며, 득표율 분포는 각 정당 득표율의 상대적 비율이나 차이 등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 중에서 정당 득표율 간의 비율은 개별 정당의 득표율 크기를 간과할 우려가 있고, 계산방식이 득표율 차이에 비해 복잡한 편이다. 또한 이 방식은 모든 군소정당의 득표율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결과 주요 정당의 수보다 큰 수치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득표율의 차이를 통해 정당체계를 구분하였다. 즉,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 2위와 3위 득표율 차이와 각 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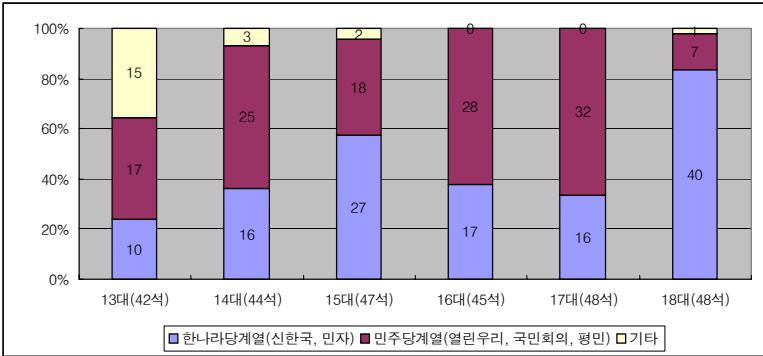
³⁾ 이들의 계산방식은 각 정당이 확보한 득표율의 제곱의 합의 역수이다. $N=1/\sum p^2$ (N =유효정당수, $\sum p^2$ =각 정당 득표율 제곱의 합)

표율 차이를 다시 비교하여 정당 득표율 분포를 확인하고 정당체계를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1당우위제, 양당제, 다당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당우위제는 득표율 1위와 2위의 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득표율 2위와 3위 간의 차이에 비해 현격히 큰 경우이며, 양당제는 2위와 3위의 득표율 차이가 클 뿐 아니라 그 수준이 1위와 2위 득표율 차이나 여타 득표율 차이보다 현격히 큰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다당제는 득표율 1위와 2위의 차이 뿐 아니라, 2, 3위 득표율 차이도 작은 경우로서 개별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작을 뿐 아니라 주요 후보의 득표율 차이 간의 차이가 제한적인 만큼 3당 중심의 다당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이 선거결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수록 그 지역의 정당체계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득표율을 통해 정당의 수를 결정하고자 하는 국내연구로는 최정욱(2005)의 연구가 있다. 그는 최다득표자의 득표율과 유효정당의 수가 반비례관계이며 멱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정당구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최다득표자의 득표율만으로 정당체계의 유형을 구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정당체계 유형은 여타 주요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다득표율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상위 정당 간의 득표율 차이 비교를 통해 정당구도의 구분하는 것이 득표율의 전반적인 분포를 설명하는데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득표율에 따른 서울지역 선거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의석수를 기준으로 1988년 13대 총선 이래 지금까지 실시된 6번의 총선 결과를 정리했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결과는 득표율에 따른 선거결과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역대 선거결과를 한 눈에 파악하기 쉽다.

〈그림 2〉 87년 민주화 이후 서울지역 총선결과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2008. 4. 20 검색)

의석비율로 볼 때, 서울지역은 13대 총선 결과 다당제의 양상에서 시작했다. 그 이후 14대 총선 때부터 제3당 및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16대, 17대 총선에서는 군소정당의 의석이 없는 전형적인 양당구도로의 변화와 민주당 우위의 구도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는 양당 간의 의석 비율이 급격히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한나라당의 1당 우위구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선거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선거결과는 양당제에 가까운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대부분의 당선자는 한나라당계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차지했다. 이외에 당선자를 배출한 군소정당으로는 통일민주당 및 공화당, 국민당, 꼬마민주당 등 모두 보수 또는 중도 정당이다. 즉, 서울지역의 선거구도 하에서 진보정당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공간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구 득표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13대 총선을 제외한 나머지 총선(14~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계열과 민주당계열 정당

이 동반하여 움직이는 양당구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

1987년 민주화 직후 실시된 13대 총선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평민당이 26.96%로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하였으며, 다음으로 민정당(26.24%), 통일민주당(23.36%), 그리고 공화당(16.07%)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진보정당(후보) 계열은 2.5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⁵⁾ 이 경우 상위 3정당의 득표율 차이는 4%를 넘지 않고, 4위 정당과 3위 정당의 득표율 차이도 10%포인트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1988년 서울지역 13대 총선 결과는 4당으로 구성된 다당구도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러나 14대 총선 이후부터는 2위와 3위 정당의 득표율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양당구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1, 2위 정당의 득표율의 합을 보면, 14대와 15대 총선에서 72.01%와 71.86%로 나타났으나, 16대 총선 이후에는 84%이상의 득표율의 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양당구도의 양상이 2008년 18대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득표율 변화추이는 <그림 2>의 의석수 비율의 변화추이와 기본적으로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18대 총선에서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하나는 민주화 이후 서울지역에서 1위 정당과 2위 정당 간의 득표율의 차이는 0.72~2.46%였으나, 18대 총선에서의 득표율의 차는 14.25%로 급격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는 1당우위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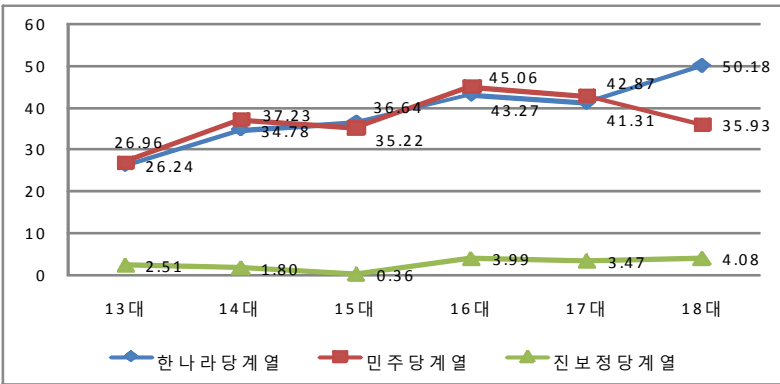
4) * 한나라당계열: 한나라당(18대총선, 17대총선, 16대총선), 신한국당(15대총선), 민자당(14대총선), 민정당(13대총선); 민주당계열: 통합민주당(18대총선), 열린우리당(17대총선), 민주당(16대총선), 국민회의(15대총선), 평민당(14대총선, 13대총선); 진보정당(후보)계열: 13대(한겨레당, 민중당, 사회당), 14대(민중당), 15대(국민연합), 16대(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17대(민주노동당), 18대(민주노동당, 진보신당)

5) 진보정당(후보) 계열의 득표율은 한겨레당, 민중당 그리고 사회당의 득표율의 합이다.

6) 13대 총선결과를 대상으로 유효정당 수를 계산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의 유효정당 수는 4.5로 전국단위(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목 2006 참조).

로 규정지를 수준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서울지역 48개 선거구 중에서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10% 포인트 미만인 경우가 27개로 절반을 상회하며, 10% 포인트를 상회하는 21개 지역선거구 중에서 2개 지역 선거구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후보가 앞선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울지역에서 1당우위 구도가 형성·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 민주당 이후 양대 정당 계열 및 진보정당(후보)의 서울지역 총선 득표율(%)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 참조(2010. 1. 20 검색)

다른 하나는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이 증가를 들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은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16대 총선부터 3%이상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18대 총선에서는 4.08%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득표율의 증가경향은 아직 득표율의 수준에서 미약하지만, 서울지역에서도 진보정당(후보)이 양당에 기초한 선거경쟁구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여준다. 그 이유는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1위 정당과

2위 정당 간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는 득표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서울지역의 정당체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별다른 선거 제도의 변화 없이 두 번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1990년 민자당 합당을 계기로 그 이전의 다당제 구도가 양당제 구도로 전환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시작되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해 나타난 선거유동성에 의해 양당제의 변화 또는 양당제를 구성하는 정당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서울지역에서의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은 정치세력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선거제도가 1인 2표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실시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정당(후보)의 원내진입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일구어냈다. 이러한 결과는 조심스럽지만 민주화 이후 보수독점적 정당체계의 변화 가능성, 즉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선거 결과는 진보정당(후보)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구 의석수(245석)가 비례의석 수(54석)보다 4.6배나 많은 현행 선거제도의 영향에 의해 정치적 대표성이 제한받는다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전국적으로 진보정당(후보)의 지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표 1>참조). 즉, 진보정당(후보)의 지역선거구 득표율은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위 정당과의 득표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후보)이 3위권에 진입한 지역은 16개 시·도 중 7개 시·도이며, 울산, 경남, 광주에서 진보정당이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2위와 3위를

차지한 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과 1위 정당 사이의 득표차가 크게 12.6배부터 작게는 2.7배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한나라당(50.01%), 통합민주당(38.26%)에 뒤이어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이 4.08%로 1위 정당과의 득표 차가 12.3배나 차이가 났다.

〈표 1〉 진보정당의 시·도 지역 득표율(2000년~2008년 국회의원선거)

구분	2000	2004	2008
전국	1.2	4.3(13.0)	4.7*(8.7)**
서울	1.0	3.5(12.6)	4.1(7.9)
부산	0.5	2.9(12.0)	5.2(8.1)
대구	0.5	2.6(11.6)	4.1(5.6)
인천	0.8	7.4(15.3)	4.5(9.1)
광주	0.0	5.6(13.1)	8.2(12.0)
대전	2.2	1.5(11.9)	0.9(6.0)
울산	17.3	18.0(21.9)	23.9(18.8)
경기	1.2	4.1(13.5)	3.8(8.1)
강원	0.0	4.2(12.8)	3.2(8.3)
충북	0.0	3.3(13.1)	2.6(7.8)
충남	0.9	2.2(10.4)	1.3(6.6)
전북	0.0	4.6(11.1)	2.3(10.0)
전남	0.0	2.6(11.2)	5.2(11.9)
경북	0.0	3.4(12.0)	1.9(6.0)
경남	2.8	8.4(15.8)	11.6(13.7)
제주	0.0	3.4(14.1)	5.57(12.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영태(2005, 231쪽)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역득표율 합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민당의 비례득표율 합

진보정당(후보)들이 서울지역 개별 선거구에서 어떤 성적을 나타냈는지를 13대 총선 이래로 1만 표 이상을 얻은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여기서 1만 표라는 기준은 서울지역 국회의

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이를 기초로 당선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라 가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대략 유권자수 800만, 투표율 60%로 볼 때 총 투표자 수는 480만, 그리고 서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48개이므로 개별 지역선거구에서 각 후보들은 평균 10만 표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고 볼 수 있다. 이중 5만 표를 얻으면 자력으로 당선된다고 할 때, 1만 표는 당선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당선가능권에 접근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987년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는 진보정당(후보)이 서울지역에서 선거구별로 1만 표 이상을 얻은 경우가 없다. 그러나 총선에서 1만 표 이상을 얻은 서울지역의 진보정당(후보)은 13대 총선에서 2명, 14대 총선에서 3명, 17대 총선에서 2명, 18대 총선에서 1명 등 총 8명이며, 이들 모두가 강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13대 총선 이래 서울지역 1만 표 이상 획득한 진보정당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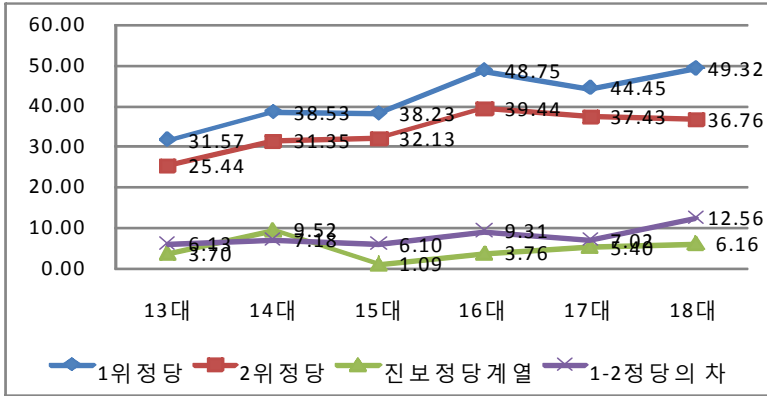
총선	13대		14대			17대		18대
명수	2(한겨레)		3(민중)			2(민노)		1(진보)
지역	종로 (제정구)	도봉갑 (조순형)	동작갑 (장기표)	구로을 (이우재)	은평을 (이재오)	관악갑 (김용)	관악을 (신장식)	노원병 (노희찬)
순위	4	4	3	3	4	4	4	2
득표율(%)	12.15	14.76	21.28	20.21	17.23	7.54	11.24	40.05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 참조 (2008. 4. 20 검색)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순위와 득표율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14대 총선에 출마한 민중당 후보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장기표, 이우재 후보는 20%대 초반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2년 14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의 강남이나 강북은 선거구도의 차이가 드러나기 이전의 상황이었고, 강북지역에서는 민주당계열 후보가

득표차이를 벌이며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지만, 강남에서는 한나라당 계열이 아닌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선전을 했던 시점이었다.

〈그림 4〉 진보정당(후보) 출마지역의 득표율 및 1-2위 정당 득표율의 차(%)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 (2010. 1. 20 검색)

선거경쟁구도를 보면, 14대 총선은 1990년 3당합당 이후 1강 2약의 경쟁구도하에서 실시된 첫 선거로서 득표율 1위, 2위, 3위 간의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특정 유형구분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과도기적 시점이었다. 1당 후보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지 않고 1위와 2위 간의 득표율 차이와, 2위와 3위 간의 득표율 차이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아직 양당제 양상이 나타나지 못하고 다당제 경향이 아직 남아있었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은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20% 초반 수준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이후 15대 총선에서는 진보정당계열의 득표율이 1.09%로 하락하였으나, 16대 총선부터 득표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진보정당계열의 출마한 지역선거구에서 1-2위 정당의 득표차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⁷⁾ 이는 진보정당(후보)가 선

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즉, 사르토리(Sartori 1976)가 지적한 연합의 잠재력과 위협의 잠재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분석: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을 중심으로

1)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요인분석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진보정당(후보)은 총 48개 지역선거구 중 17대 총선 30개 지역선거구 그리고 18대 총선 31개 지역선거구에 출마하였으며, 61개 지역선거구에서의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은 평균 0.21이며, 범위는 최소값 0.06(18대 총선 종로지역선거구)에서 최대값 0.96(18대 총선 노원병지역선거구)까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종속변인인 선거경쟁력을 0.21 이상과 0.21미만으로 구분하여 각 독립변인이 평균차를 통해 선거경쟁력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 3>는 17대와 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후보)가 출마한 서울 지역 선거구의 특성과 종속변인으로서 선거경쟁력의 평균 및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7) 진보정당계열의 득표율이 1-2위 정당의 득표차보다 높은 지역선거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지역선거구	9/26	4/8	0/14	11/45	15/30	12/31
비율	34.6%	50%	0%	24.4%	50%	38.7%

〈표 3〉 각 변인의 기술통계

	선거경쟁력	대학이상	주택보유	투표율	지역
사례수	61	61	61	61	61
평균	0.2117	47.797	49.79	54.168	0(최빈값)
표준오차	0.01644	1.0905	0.9096	1.0903	0.04
표준편차	0.12839	8.5172	7.1041	8.5154	0.3
최소값	0.06	32	39.6	39.9	0
최대값	0.96	77.7	66.4	66.4	1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과 학력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거경쟁력이 평균(0.21)이상인 지역선거구보다 평균미만이 지역선거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선거경쟁력이 평균미만이 지역선거구에서 대학이상의 학력자는 48.104이며, 평균이상인 지역선거구의 대학이상의 학력자는 47.213으로 낮다. 이는 유권자 조사를 분석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보유여부는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주택보유비율이 낮은 지역선거구일수록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선거구일수록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투표율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없지만 평균값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선거경쟁력이 평균이상일 경우 투표율 평균이 55.975로서 평균미만(53.219)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선거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강북과 강남이라는 지역변인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 경쟁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북과 강남의 선거경쟁력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있다($F값=4.111*$). 이는 지역변인과 선거경쟁력 간에 관계가 통계적 유의하며, t 값이 -1.087 로서 다른 변인들보다 크게 나왔다. 즉, 강북지역일수록 선거경쟁력이 높으며, 강남지역인 경우에는 선거경쟁력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 분석결과

	선거경쟁력(CI)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F값)
성별	≥ .21	21	49.879	0.9813	1.328 (0.789)
	< .21	40	49.57	0.7979	
대학이상	≥ .21	21	47.213	8.9656	-0.385 (0.536)
	< .21	40	48.104	8.3728	
주택보유	≥ .21	21	49.148	7.2622	-0.509 (0.071)
	< .21	40	50.128	7.0893	
투표율	≥ .21	21	55.976	8.6179	0.017 (1.206)
	< .21	40	53.219	8.4135	
지역	≥ .21	21	0.0476	0.21822	-1.087 (4.111*)
	< .21	40	0.125	0.33493	

* $p > 0.05$, ** $df=59$

정리하면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과 관련된 가설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으나, 남성과 대학미만의 학력자가 많은 지역선거구일수록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보유비율이 낮고 투표율이 높은 지역선거구일수록 그리고 강북지역일수록 선거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평균값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독립변인의 영향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후보)의 득표율

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종속변인을 지역선거구에서 승리한 정당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5〉 1위정당의 지역선거구 특성 비교

	1위정당	사례	평균	표준편차	t값 (F값)
성별	민주당계열	28	49.79	0.9519	0.937 (0.400)
	한나라당계열	33	49.58	0.796	
대학이상	민주당계열	28	45.938	6.9332	-1.591 (0.549)
	한나라당계열	33	49.375	9.4797	
주택보유	민주당계열	28	49.207	8.059	-0.588 (1.508)
	한나라당계열	33	50.285	6.2672	
투표율	민주당계열	28	57.828	7.6597	3.345 (0.194)
	한나라당계열	33	51.062	8.0491	
지역	민주당계열	28	0.0357	0.18898	-1.592 (10.949*)
	한나라당계열	33	0.1515	0.36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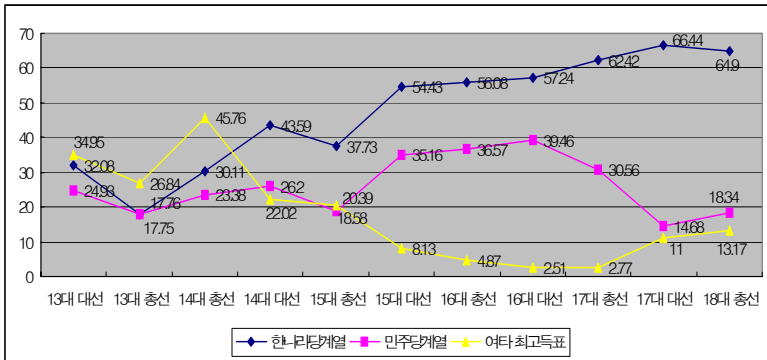
* p> 0.05 ** df=59

그 결과 민주당이 1위 한 지역선거구의 특성과 진보정당(후보)의 선거경쟁력이 평균 이상인 지역선거구의 특성이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민주당 계열은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 남성이 많고 대학미만의 학력자가 많은 그리고 주택보유비율이 낮은 지역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투표율이 높고 강북지역에서 승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후보)와 민주당계열이 유사한 지지공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나라당의 지지공간은 강남을 중심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선거구-강남갑과 노원병 지역선거구-중심으로 선거경쟁구도의 변화가 진보정당(후보)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강남과 강북의 선거경쟁구도의 변화와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

1987년 민주화 이후 서울지역 선거결과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대별된다. 간단히 말해 강남지역은 한나라당 강세, 강북지역은 민주당 강세 양상이 지속되었다. 앞의 서울지역의 집합적 결과는 이 두 지역의 중간 정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강남지역에서 강남갑구, 강북지역에서 노원병을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의 선거결과의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은 1987년 이래 강남갑의 선거결과이다.

〈그림 5〉 민주화이후 서울 강남갑 총선 및 대선 결과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 참조 (2008. 4. 20 검색)

강남갑 지역 득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한나라당계열 정당후보의 득표율이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면서 점차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대 총선까지는 강남갑 지역의 경우 다당구도의 양상이 나타났고, 더구나 한나라당계열과 민주당계열이 아닌 다른 제3정

당 후보가 1위였다. 예를 들어, 14대 총선의 경우 1위 후보는 국민당의 김동길 후보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의 후보는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강남갑 지역의 선거결과는 14대 대선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다. 우선 득표율 1위인 한나라당계열 정당의 후보가 2위 후보와 큰 득표차로 당선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2위와 3위의 득표차는 아주 적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크고, 2, 3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경우 1당우위제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 시기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20% 미만으로 1당우위제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적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강남갑 선거결과는 1당우위적 경향과 3당으로 구성된 다당제 양상이 복합된 경우로 규정할 수 있다.⁸⁾

그 이후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02년 16대 대선까지 강남갑 지역의 선거결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계열 정당(후보) 사이의 간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당구도가 형성되었다. 즉, 한나라당계열과 민주당계열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유지되고 여타 후보의 득표율을 흡수하면서 동반 상승하는 양당구도에 가까운 양상이었다. 그렇지만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20% 포인트에 달하고 1위 정당의 득표율이 50%를 상회하여 불균형한 양당구도에 1당우위제 경향이 섞여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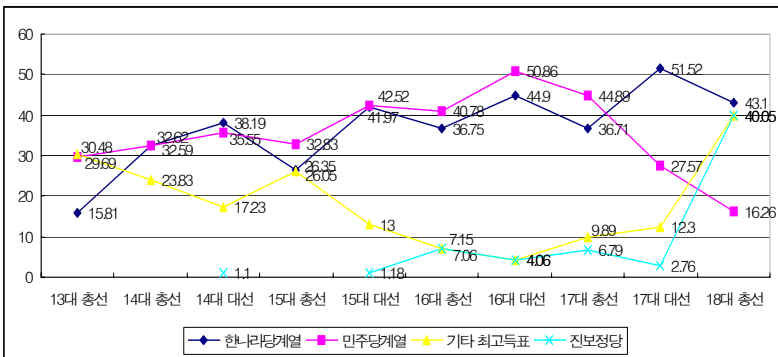
그런데 2004년 17대 총선부터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의 득표율은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한나라당 중심의 1당우위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7대 총선에서 탄핵역풍에 한나라당은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고

⁸⁾ 강남갑지역의 15대 총선에서는 소위 ‘꼬마민주당’의 홍성우후보가 득표율 20.40%로 2위를 차지하면서 한나라당계열과 민주당계열의 후보의 득표율을 동반 하락시켰고 민주당후보를 3위로 밀어냈다.

전했지만, 강남갑 지역에서는 오히려 열린우리당과 약 32%의 득표차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1, 2위 득표율 차이가 50% 포인트를 넘었으며, 2, 3위 간 득표율 차이는 4% 포인트 미만인 전형적인 1당우위구도가 나타났다. 비록 18대 총선의 경우에는 1당우위구도가 완화되었지만, 전직 한나라당의원인 무소속 서상목후보의 득표율 13.17%까지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에 합치면 1당 우위적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7대 총선부터 강남갑 지역은 전형적인 1당우위구도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거경쟁구도 하에서 진보정당(후보)의 득표율과 선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 즉, 17대 총선에 강남갑의 득표율은 2.77%였으며, 선거경쟁력은 30개 출마지역선거구 중 가장 낮은 0.09로 나타났다. 강남구갑의 경우, 대학이상의 학력비율이 77.7%로 평균인 47.8%보다 매우 높으며, 주택보유율(53.1%)과 투표율(58.3%)이 평균값보다 높다.

〈그림 6〉 노원병지역 역대 선거결과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 참조 (2008. 4. 20 검색)

- * 13대 총선부터 16대 대선까지 노원을 득표율, 17대 총선 이후 노원병 득표율.
- * 13대 대선 시점에 노원구는 서울지역 지역선거구로 편입되어 있지 않았음.

* 14대 대선에서 진보정당후보는 무소속으로 백기완후보가 출마.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2위를 한 18대 총선의 서울 노원병이다. 노원병 지역의 선거결과는 민주당계열 정당(후보)의 우위가 지속되었지만 2위 한나라당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5% 미만이었고 2위와 3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30% 포인트 수준에 달하는 양당제 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997년 12월 대선 때까지 노원병 지역은 아직 독자적 지역선거구로 분리되지 않아 노원을지역과 중첩되지만 그 기본적인 선거패턴은 살펴볼 수 있다.

이 지역선거구의 역대 선거결과 중에서 두드러진 사례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3위 정당후보의 득표율이 높아 2위와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경우이다. 이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3위를 했다면 노원병 지역이 서울에서 예외적인 지역선거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확인했듯이 15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는 어느 누구도 1만표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15대 총선까지 이 지역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정당 후보는 김종필 중심의 자민련과 정주영 중심의 국민당 후보였다. 주지하다시피 자민련과 국민당은 모두 이념적으로 진보정당과는 거리가 먼 보수정당이였다. 그러므로 노원병 지역에서 과거 진보정당 후보의 성과가 부각되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노원병 지역은 15대 대선 이래로 민주당과 한나라당계열의 정당후보 중심의 양당정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서울의 강북지역과 마찬가지로 17대 대선에서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의 득표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진보정당 후보인 권영길 후보는 16, 17대 대선 당시 노원병 지역에서 각각 4.06%, 2.76%를 얻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는 5.89%를 얻었고, 청년진보당 후보가 16대 총선에서 1.26%를 얻

은 바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후보는 17대 총선에서 6.79%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이외에 14대 총선에서 무소속 오세철 후보가 1.1%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의 역대 선거결과를 살펴보아도 진보정당(후보)에 대한 결과는 여타 서울지역의 선거결과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18대 총선에서 노원병지역에 출마한 진보신당 후보가 40.05%의 득표율을 얻어 2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3.05%포인트이고, 2위와 3위의 득표율 차이는 23.79%포인트이다. 3.05%와 23.79%의 차이는 20%를 상회하여 18대 총선에서 노원병지역은 양당구도에 가깝다.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의 득표율은 같은 행정구역이자 인근 지역선거구의 통합민주당 정봉주(노원갑)후보의 37.62%, 우원식(노원을)후보의 44.09%와 비교되는 높은 득표율이었다. 이는 노회찬 후보가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즉, 인지도가 높은 경우 서울지역에서 더 이상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원병의 특성을 보면, 대학이상의 학력자의 비중이 평균이 47.8%보다 약간 높은 48%이며, 주택보유자의 비율은 61.5%로 평균보다 12%로 높다. 투표율은 53.8%로 평균보다 낮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진보정당(후보)의 높은 선거경쟁력은 지역선거구의 특성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 즉,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후보 결정요인으로 정당보다는 인물이 더 크게 작용했으며, 후보가 출중할 때 정당득표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다(정영태 2008, 43).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제1당의 위상을 유지해온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나라

당 후보에 상대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에 대한 가능성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서울 강북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양당구도는 17대 대선에서 이탈했지만 18대 총선에서 바로 복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8대 총선에서 복원되는 양당구도에서는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경쟁자로 민주당 일 필요가 없고 진보정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진보, 개혁 정당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명도를 지녀 한나라당 후보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면 진보정당 후보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5. 결론

1987년 이후 서울지역 총선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보수당인 한나라당계열과 중도정당인 민주당계열 정당이 서울시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타 당선자들도 보수 또는 중도 정당 소속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양당제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선거제도의 기본틀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정당체계의 유형은 다당구도, 양당구도, 1당우위구도의 경향을 순서대로 나타냈다.

서울에서 양당구도는 기본적으로 집권세력과 정치엘리트 간의 인위적인 3당합당이 결정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이를 주도한 세력의 의도와 달리 3당합당을 통한 거대정당의 출현은 그에 대항하는 정당의 출현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2년 총선에서 민자당에 대항하는 정당은 서울에서 동일하지 않았다. 서울지역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정주영의 국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양당

구도는 국민당이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후보가 패배하고 사라지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도 없고 1992년과 같은 정계개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제가 흔들리고 1당우위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 서울지역에서 1당우위구도가 나타났던 것은 기본적으로 중도정당인 민주당계열 정당후보의 득표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여기에 한나라당계열 정당후보의 득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당선결과에서 1당우위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지만 18대 총선 서울지역 득표율은 1당우위 구도보다는 양당구도의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이러한 양당구도 하에서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3정당 후보가 서울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을 나타냈다. 특히 양당구도가 지배적인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는 지금까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득표율 또한 정당체계 유형구분에 영향을 주기 힘든 군소정당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진보정당 서울지역 후보들의 득표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서울지역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지금까지 선거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이것은 양당후보의 득표율을 합산한 결과이고, 이 득표율조차 집합적 수준에서는 당선과 거리가 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후보)인 노회찬 후보가 2위를 했다는 점은 87년 선거이후 진보정당 후보가 얻은 최고의 성과였다. 노원병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기초한 양당구도 하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은 진보정당 후보가 양당구도하에서 선거경쟁력을 갖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회찬 후보의 사례를 볼 때 서울지역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이나 부담감은 선거에 영향을 주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울 인근의 경기 고양시 덕양갑 지역 선거구에 출마했던 심상정 후보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이 낮은 이유가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보수화 되는 성향보다는 후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인지도가 낮은 진보신당 또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정당의 이미지가 높아졌으며, 정당조직률도 높아졌지만 과거의 득표율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인지도 높은 인물이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올 경우 선거에서 선거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진보정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사회인구학적으로 민주당과 중첩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요 사례로 살펴본 노원병지역의 경우 미미하게나마 한나라당 지지강세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사회인구학적 조건의 특징이 미미한 경우 진보정당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 후보의 인지도, 지지기반이 중첩된 정당 후보의 득표력 등의 요인이 진보정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보수적 정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고, 1위대표제에 기초한 지역선거구에서도 진보정당의 선거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모색은 불가피하다.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이외에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정당이자 정치인으로서 전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출마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로 규

정되는 2008년 18대 총선 서울지역 결과를 통해 우리는 선거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보정당이 유효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맹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정당의 강령과 정책만을 고려한 선거전략 및 선거전술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후보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전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진보정당이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브랜드와 더불어 진보정당 후보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발하고 대중적인 지역활동 및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27일 접수, 2010년 5월 18일 채택)

참고문헌

- 강명세. 2005.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한국정당학회보』. 4(2).
- 강원택,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13(2).
- 김영태. 2003. “통치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2(2).
- 김왕식. 2006. “1인2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서울: 오름.
- 김형준·유성모. 1997.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4).
- 구갑우·김민영·안병진·장석중·정상호. 2008. “18대 총선평가와 진보의 새길 찾

- 기.” 참여사회연구소 좌담.
- 문우진. 2005. “현직자의 선거 경쟁력과 선거지출의 효율성: 공간모형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9(1).
- 문우진. 2006. “현직자의 정책입장, 정치자금, 선거 경쟁력.” 『한국정치학회보』. 40(2).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왜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2).
- 박찬욱. 2004. “제17대 총선에서 2표 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한국정치연구』. 13(2).
- 변창흠. 2008.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환경정의·참여연대 주최.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수도권편』. 서울: 후마니타스.
- 안순철·가상준. 2008. “17대국회의원선거의 민주노동당 투표자에 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5(2).
- 이남영. 1996. “한국 국회의원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김광웅·이갑윤 편. 『정당·선거·여론』. 서울: 나남.
- 이상목. 2006. “한국의 정당체제에 대한 두베르제 법칙의 적용가능성: 선거제도와 제도외적 요인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2(2).
- 이주원. 2008. “원주민 입장에서 본 장위 뉴타운.” 환경정의·참여연대 주최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 이지호. 2009.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1).
- 임혁백. 2008. “진보의 패배와 진보의 희망.” 『조선일보』. 2008. 04.
- 장훈. 1999. “한국의 선거제도의 현실과 개혁.” 한국의회발전위원회 99-00.
- 장훈. 2006.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0(5).
- 정영태. 2005.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정당: 한국정치의 희망 찾기II』.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 정영태. 2008. “두 개의 진보정당과 18대 총선 그리고 전망.” 『노동사회』. 5월.

- 정준표·정영재. 2005.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4(2).
- 조명래. 2008. “뉴타운 사업의 논란과 전망: 뉴타운의 정치학.” 환경정의·참여연대 주최 긴급토론회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 진영재. 2000.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계산법의 문제점: 정당연합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4).
- 최정욱. 2005. “정당의 수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모색: 최대득표율이론과 검증.” 『한국정치학회보』. 39(1).
- 황아란. 1998.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 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 황아란. 2008. “선거환경 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친 영향: 제18대 총선에서 영남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7(2).
- Cox, Gary.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Duverger, M. 1954. *Political Parties*. Chichester: John Wiley.
- Laakso, Markku and Rein Taagepera. 1979.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 to West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
- Sartori, G.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An Analysis on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the Left Parties in Seoul: A Focus on Socio-Economic Factors

Hyung-Chul Kim · Yong-Soo Park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a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left parties in Seoul. This study argues that the left parties must be searching for a solution to increasing electoral competitiveness in constituency as well a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voting. Thus, we set up a hypothesis whether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which are the level of education, degree of real estate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 have an effect on the rate of the number of vote and the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left parties.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levels of education and degree of real estate have not statistical significance except for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However the candidate of New-Progressive Party one of the left parties was second placed at Nowon-III district in Seoul of the 18th general election. This case shows that the recognition of left party and candidate has an effect on the elector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strategy to enhance the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left parties should increase the recognition of left parties and candidates as well as the reform on electoral system.

Key words: left party, electoral competitiveness, party system, effective number of parties, mixed number majoritarian system.

